

'장기표류' 5·18법안 연내 처리 '청신호'... 거대 양당 '강한 의지'

이낙연 대표, '5·18 3법' 연내 처리 의사 강조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통과 협력' 약속

보수진영 정당의 '판지'로 장기표류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의 올해 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두 거대 정당이 잇따라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5·18 관련 법안 중 핵심 법안을 당론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법안의 연내 처리 입장을 공식 밝혔다. 지난 24일 대표 취임 이후 두달여만에 광주를 처음 방문한 이낙연 대표는 이른바 '5·18 3법'(역사왜곡처벌법·공법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연내 처리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대표 법안인 (오월열사의) 명예훼손과 5·18 진상규명에 관한 법은 오는 27일 의원 총회를 열어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짓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그 어느때보다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탄지를 걸면서 5·18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면산만 보던'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호남 끌어안기' 서진(西進) 전략이 속도를 내면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무릎을 꿇은 뒤 5·18 관련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데 이어, 이달초 국민의힘 정은찬 국민통합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이 광주를 찾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5·18 관련 법안 통과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법안에) 심도있는 내용을 담도록 하려 한다.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오월단체와 토론하고 수렴한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소통 노력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전남도정책협의회에서도 5·18법안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변화가 과거와 달리 예상치 않게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집권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호남 끌어안기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5·18 관련 법안 통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서진전략은 법제는 2022년 대선, 가까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아야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면서 "대권을 잡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진정성으로 이어지면 장기표류했던 5·18 관련법도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오월영령을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호남 다가가기 진정성은 5·18 관련 법 국회통과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면서 "지역민의 기대가 배신감으로 변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추미에 법무장관, 국감장 다시 선다

오늘 국회 법사부 종합감사...尹작심발언 맞대응 주목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들어 가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총도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에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6일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엔 법무부, 19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22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바 있다.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법사위 국감은 마무리된다. 이날 종합감사는 법무부만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추미에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지만,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데다 몇 차례 공식 해명을 내놓은 바 있어 논란은 그 이상으로 확대되진 않았다.

그러나 '라인자산운용' 사건이 법무·검찰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만큼 추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총장의 작심 발언 등으로 다소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두 차례 '육중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는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이는 윤 총장이 해당 의혹들을 묵살했다는 의심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추 장관은 "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을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또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찰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감은 관련 질의응답이 주요하게 다루

졌다. 국감 시작 직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고, 취목을 유지하던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종합국감에서는 야당의 관련 지적과 이에 대한 추 장관 답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눈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입장을 밝히자마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총장은 범상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못 박았다. '윤석열 패싱', '학살 인사' 논란이 있었던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여야, 공수처 담판 짓는다...추천위 구성돼도 충돌 불가피

野, 추천위원 후보 2명 내정...공수처 출범 물꼬 트나

검증 통과 불확실...결격 사유 드러날 경우 다시 지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최종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추천위가 구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기준으로 공수처는 이미 법정 출범시한(7월 15일)을 103일째 넘겼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선임 의사를 밝히면서 뒤늦게나마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내린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현 변호사를 추천위원 후보로 내정했고,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의석에서 압도적 수적 우위를 차지해 법 개정을 좌우할 수 있는 민주당

이 야당의 추천위원 선임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보다, 추천위 내에서 합법적 비토권을 발휘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국민의힘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6일 야당 몫 추천위원 후보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자당 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다. 여야 모두 추천위원 선임을 마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다만 야당 몫 추천위원 검증과 공수처법 개정 협상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위원으로 선임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위원직을 사임했다.

국민의힘이 선임한 추천위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격 사유가 드러날 경우, 또다시 새 후보 물색에 들어가면서 추천위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내정자로 언급된 이현 변호사는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천위가 꾸러져도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없어,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를 또 다른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며 "추천위는 구성하지만,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난제는 여야가 각기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놓았다. 뉴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